

##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박 승\*\*

**논문 초록** 한국경제는 지금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위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분배위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위기 등 세 가지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계층상승이 용이토록 하는 체제적 개혁, 투자와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정책전환,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잠재성장능력을 확대하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컨대 노동개혁과 같은 성장개혁은 진보층이 반대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나 고소득자 증세에는 보수층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을 한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 주제어:** 경제위기, 소득재분배, 구조개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0, P1

투고 일자: 2016. 6.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7. 4. 게재 확정 일자: 2016. 7. 7.

\* 본 원고는 2016년 4월 28일(목), 중앙대학교 302관(대학원) 503호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6년도 제1차 '원로 석학과의 대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임.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mail: ps360216@gmail.com

## 1. 문제제기: 한국자본주의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형 자본주의는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고 유럽형은 공동체 연대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두 체제는 장단점이 있다. 미국형이 자본축적과 성장효율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형은 형평과 복지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중간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주의는 미국형보다도 더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부동산이 자본축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뒤 늦게 압축적인 방법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 평등이나 삶의 질보다도 자본축적과 성장효율을 우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50년간(1964-2013) 도매물가가 22배 올랐는데 땅 값은 2,976배 상승하였다.<sup>1)</sup> 부동산 가격상승은 개인에게는 부의 증가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주거비 상승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귀결되어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익은 사회이익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서가 지배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는 사회적 재분배기능이 거의 없는 사회체제 속에서 빈부는 세습되고 계층이동의 길은 거의 막혀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헬조선’ ‘흙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의 말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사회는 못살고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쌀이나 옷과 같은 사유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빈곤사회에서는 가능하다. 개개인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 교육 의료 문화 사회질서 공공시설 사회안전망 등등 공공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나 혼자만 잘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혼자서 공기를 깨끗하게 마실 수 없는 것이고 나 혼자 학교를 지어 내 자식만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공공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계에 와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서가 지배하면 그러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개인이 부유해도 사회가 가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1) 한국은행 내부 자료.

전체가 잘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를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국민생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자본주의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2015년 잠정추계치로 보면 1인당 총소득이 한국은 27,200달러 일본은 32,400달러이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개 4-5만 달러에 있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소득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내찬(2012)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복수준은 조사대상 OECD 34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sup>2)</sup> 출산율, 국민행복지수, 청소년 생활만족도 등은 바닥인 반면 노인빈곤률이나 자살률 등은 가장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5년 26위로 내려갔다.

자유 개방 경쟁을 기본질서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을 극대화한다. 생산은 가장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장 값싸게 생산하는 사람이 독식하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 빈익 빈부익부 약육강식의 양극화현상은 필연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주의적으로 편향된 시장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사회에선 1등뿐 아니라 2, 3등은 물론, 꼴등도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는 사회적 가치와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양극화경제는 소비침체와 가계빈곤을 결과하여 결국은 성장자체를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의 저성장과 저고용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재분배정책이나 사회적성장정책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시장질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조정기능이 매우 미약하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개혁과정에서는 이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치달지 않도록 하고 전체 사회이익의 틀 안에서 개인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며, 함께 더불어 살고 계층이동이 용이한 그러한 자본주의 질서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2)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였다.

## II. 한국경제의 위기현상

한국경제의 위기는 성장과 분배 양쪽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성장위기는 저 출산 고령화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추세적으로 깊어짐에 따라 투자와 성장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분배위기는 선성장 후복지정책과 소득분배 양극화현상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선성장 후복지정책이 경제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성장위기

경제성장 활력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6.5%에서 2000-09년간 4.5%, 2010-14년간 3.5%, 2015-18년간 3.1%로 내려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1993-1998) 7.1% 김대중 정부(1998-2003) 5.0% 노무현 정부(2003-2008) 4.3% 이명박 정부(2008-2013) 3.3%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2.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고용기회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높다. 2016년 2월의 실업률은 4.1%, 청년실업률은 12.5%에 이른다. 부가가치 10억 원당 고용인원 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 계수는 1990년의 43.1인에서 2013년 8.8인으로 줄고 있다. 2013년의 경우를 보면 상장된 대기업들의 매출이 7%늘었지만 고용은 2% 감소했다.

가계와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5년 500조원에서 2015년 1200조원으로 급증했다. 국제금융협회(IIF, 2015)는 2014년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의 84%에 이르러 선진국들의 평균 74%, 신흥국들의 40%에 비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그 증가율이 선진국에서는 보합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 부채도 2000년의 100조원(GDP의 15%)에서 2015년 590조원(GDP의 38%)로 급증하고 있고 이 밖에 정부기업부채도 500조원이 넘는다. 가계와 정부의 부채급증현상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노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 분배위기

소득분배의 순환경로가 막혀 분배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소득이 국내투자 되어 고용과 가계소득증대로 선순환 되었던 반면 지금은 대기업이 기업소득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하거나 사내유보로 쌓기 때문에 가계로의 소득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 1>과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표 2>에서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2-93년의 71.5%에서 2013-14년에는 61.7%로 줄고 법인기업 소득은 15.9%에서 25.1%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중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계비중이 3%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표 1>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증가율(%)

	1975-97평균	2000-10평균
경제성장률	8.1	4.5
법인기업소득증가율	8.2	16.4
가계소득증가율	8.1	2.4

출처: 한국은행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표 2> 국민총소득의 부문별 분배구성비(%)

	1986-87평균	1992-93평균	2013-14평균
법인기업	16.5	15.9	25.1
가계	70.5	71.5	61.7
정부	13.0	12.6	13.2
국민총소득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은행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국민저축도 가계부문과 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3>). 1990년대에 20%수준이었던 가계저축률은 2012-14평균 4.8%로 감소하여 독일의 12% 미국의 6%보다도 낮다. 특히 기업에 집중되는 저축은 국내투자보다도 해외투자과 사내유보로 활용됨으로서 저소비 저고용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 국민총저축의 부문별 구성비(%)

	1986-87평균	1992-93평균	2013-14평균
법인기업	36.6	33.5	60.0
가계	44.4	46.0	19.4
정부	19.0	20.6	20.6
국민총저축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은행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소득분배는 악화되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역주행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IMF (2016)의 아시아 소득분배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최상위 10%소득자가 전체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은 1995년의 29%에서 2013년에는 42%로 증가하였는데 이 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반면 일본 41%이 우리와 비슷할 뿐, 호주 31%, 말레이시아 22%는 모두 우리보다 낮다. 한편 중위소득 50%-150%구간의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율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하고 있고 중위소득 50%이하 소득계층인 빈곤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전인구에서 중산층과 빈곤층이 점하는 비율(%)

	2003	2012
중산층	60	41
빈곤층	18	26

출처: 한국은행과 통계청.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현상은 부와 빈곤을 세습화하고 계층상승의 기회를 단절시키고 있다. 평생 모야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날 때부터 정해진다. 그 뿐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상승의 기회가 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어 있다(KDI, 2015년 4월). 그 결과 소외계층은 절망하고 체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기서 ‘헬조선’ ‘흙 수저’ 등의 자조 섞인 말이 젊은 세대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91%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고 전 국민의 81%가 계층상승이 한국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답하고 있다. 신동아(2015)의 20-30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의 78%가 빈부격차는 계속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고 전체의 51%는 나아질 희망이 없어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답했다. 어느 사회에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도 내 자녀들은 노력해서 잘 사는 계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없는 삶은 살맛이 나지 않는 삶이며 이러한 사회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한국사회에 대한 위기경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Ⅲ. 성장환경변화와 정책전환

#### 1. 새로운 성장정책 방향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압축적 고도성장에 성공했다. 그 때 우리는 투자할 곳은 많았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었으며 저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만 부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고 여기에 국내 노동력을 결합하여 공장을 짓고 생산해서 이것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경제성장을 기획하고 연출한 것은 정부였으며 직접 실행한 것은 대기업이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주도, 투자주도, 수출주도, 대기업주도, 정부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환경은 전연 다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그 동안 임금상승, 주거비와 교육비 상승, 투쟁적인 노사관계 등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구조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 수출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중국 등 신흥국들의 부상은 이러한 한국의 환경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투자나 수출은 과거와 같이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 5>에서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투자나 수출이나 제조업성장 모두 두 자리 수의 성장을 해서 7-8%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성장률이 3%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한계에 이르렀다. 수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거와 같이 제조업이나 투

자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은 3% 이내의 저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식어가는 성장활력을 되살리려면 투자나 수출이나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을 찾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표 5〉 성장주요지표의 변화(실질증가율 %)

	1993-95평균	2000-02평균	2015년
국내고정투자	11.7	7.0	3.8
수출(달러표시)	17.7	4.2	-8.0
제조업	10.4	9.5	1.5

출처: 한국은행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첫째, 투자와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적 부문은 소비다. 소비는 그 동안 경제 성장에 있어서 천대기처럼 소외되어 왔다.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라고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자금을 대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투자나 수출보다도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단계에 왔으며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의 전략변수는 투자나 수출이 아니라 소비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은 예외 없이 소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성장방식을 따라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투자나 수출은 대외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소비는 국내적인 것인 만큼 가계가처분소득 조정, 빈부격차 축소 등 소득분배 과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소비의 동향을 보면 2013-15년의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9%에 불과 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3%였음을 감안하면 소비가 경제성장률만큼만 늘어도 4%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소비가 기업투자나 수출과 함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은 대기업이 주도 해 왔으며 가계는 소외되어 왔다. 이렇게 된 것은 투자와 수출을 대기업이 맡아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온갖 특혜지원을 해 왔고 가계는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을 늘려 대기업에 투자자금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투자와 수출의 성장주도력이 한계에 이른 지금에 와서는 가계가 소비를 통해 성장을 주도해 가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 하는 성장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기업성장이 투자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ing effect)에 의한 성장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낙수효과와 함께 쌍끌이 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주도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그 빈자리를 서비스업이 채워야 한다. 제조업은 대외 경쟁력이 있어야 성장을 주도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고비용구조와 저임금신흥국들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업 성장은 3%를 넘기 어려운 한계에 와 있다. 더구나 제조업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부가가치 10억 원당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예컨대 화학제품의 경우 1990년의 49.2에서 2013년에는 4.3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5 내외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그 3배에 해당하는 15 내외이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수산업이라는 점이 제조업과 크게 다른 점이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특히 사업지원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복지서비스, 문화체육 서비스 등은 고용유발력이 높고 성장건인력이 커 이 부문의 서비스 육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저 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쿠즈네츠(S. S. Kuznets)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차량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간다고 했다(박승 경제발전론 제11장). 역사의 긴 발전과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그는 경제성장이 시작된 역사는 인구증가와 같이 왔으며 인구증가가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고 했는데 오늘날 인구절벽에 당면한 나라들이 모두 쿠즈네츠의 뒷에 걸려 있는 것이며 한국 또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2로 OECD에서 가장 낮으며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 미국 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화 비율은 2015년의 13%에서 2050년에는 40%로 상승하여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구조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저성장의 최대 요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문을 닫고 주유소의 45%, 서적판매의 30%가 줄었다. 남북통일이나 남북경제협력은 이 문제해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그 실현성은 요원하다. 이민을 통한 외국인력 활용은 경제부흥기에 터키나 파키스탄 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후유증이 클 수 있으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내부의 자력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비용을 사회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성장 후복지의 성장방식을 따라왔다. 대기업에 의한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화단계에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투자나 수출보다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성장보다 복지가 너무 뒤져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가 성장을 과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단계에서의 복지증대정책은 국민생활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증대를 통한 성장촉진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근래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원칙을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 등은 모두 이러한 정책 방향이라 할 것이다.

## 2. 순환적 침체인가 구조적 침체인가

경기침체에는 순환적 침체와 구조적 침체가 있다. 순환적 침체는 경기변동과정에서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아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재정금융정책이 유효한 치유수단이 될 수 있다. 침체기에는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그리고 호황기에는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정책을 쓴다.

이와 달리 구조적 침체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여 나타나는 침체현상인데 이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 재정금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개혁이란 잠재성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교육 세제 노동 규제 산업 부동산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혁을 뜻한다. 구조적 침체인 경우에도 재정확대나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쓸 수는 있으나 그 경우는 그러한 부양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일시적 진통효과가 필요한 경우이다. 단기부양책은 구조적 침체경제에 대해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이다.

구조적 침체에 대해 계속 단기부양책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활력을 넣어 당장 가시적인 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수요나 투자수요를 늘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유동성 함정의 내성이 생겨 경기침체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경험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Plaza) 합의이후 환율이 1985년의 달러 당 238엔에서 1989년 128엔으로 내려가고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6%에서 2%로 하락하였다. 이 때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의 금융완화정책과 적자재정에 의한 재정확대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체감경기가 일시 호전되었으나 1991년부터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폭락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를 맞고 공적자금까지 투입한 바 있다. 그 뒤 오늘날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이 재정과 금융을 통해 투입되었지만 오늘의 결과는 제로성장과 제로물가의 침체현상이다. 그러는 사이 일본의 GDP에 대한 국가부채는 1990년의 67%에서 2015년 246%로 급증하였고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다. 일본은 1990년경 이미 저 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과 투자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구조적 침체국면에 진입했던 것인데 이것을 환율면의 엔화절상으로 인한 일시적 침체현상으로 오진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경기침체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두 말 할 것도 없이 구조적인 것이다. 그것은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잠재성장률과 현실성장률이 다 같이 3%내외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단기부양책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일시 진통효과를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우리의 침체가 경기변동으로 인한 순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에게서 정책적 전환과 함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V. 경제구조개혁의 방향

우리의 경우 구조개혁은 성장구조개혁과 분배구조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분배개혁이 앞장서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의 경우 성장보다 복지가 더 뒤 떨어져 있다는 점, 둘째 경제성장에 있어 금후에는 투자나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전략적 변수라는 점, 셋째 현 경기침체의 본질은 저성장보다도 양극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전월세 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위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1. 분배구조개혁: 소득재분배 정책

### (1) 소득재분배에 정부가 나서야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분배도 개선되고 경제성장률만큼 가계소득도 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기업소득→투자→고용→가계소득의 선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선순환은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막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배면의 시장실패라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이러한 재분배정책이 해야 할 과제는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순환을 정상화시켜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촉진하는 일, 계층상승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 재정투자를 늘려 민간의 국내투자 감소에 대응하여 성장과 고용을 보완하는 일 등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 때문에 소득양극화현상은 시정되지 않고 복지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황에 있다. 정부 재정이 빈곤문제 해결에서 하는 역할도 최하위이다. 2013년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로서 그 차이는 2.5% 포인트인데 이는 OECD 33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한국은행·통계청, 2014). 노인빈곤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의 노인빈곤율이 한국은 50%로 OECD 34개국 중 1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재분배가 있기 전의 1차분배에서는 노인빈곤율이 OECD는 평균 70% 한국은 61%로 한국이 낮지만 연금지급 등 재분배후에는 OECD 12% 한국 50%로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분배위기 문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분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는 2차분배 즉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이다.

〈표 6〉 소득재분배기능의 국제비교(2014-15년 기준)

	OECD	한국	비고
조세부담률	26%	18%	OECD 최하위
총 국민부담률	35-45%	24%	30개국 중 28위
정부 사회보장지출, GDP%	22%	10%	28개국 중 28위
정부지출 중 사회보장비%	36%	16%	OECD 최하위

출처: 한국은행 내부자료와 국제기구 통계자료에서 작성.

〈표 6〉에서 우리는 한국의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국민들 삶의 질을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뒤지도록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소비침체를 유발하여 저성장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분배개혁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 (2) 소득재분배의 재원마련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은 재정건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증세, 각종 사회보험료 현실화, 공기업의 흑자경영과 부채축소, 공공부문 연금개혁을 통해 연간 대략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의 21%에서 2015년 18%로 역주행 해왔다.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총국민부담률은 24%로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금이라면 “내기만 하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내고 되돌려 받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낸 것보다 더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취지이다.

증세에는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재분배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율이 너무 낮다는 점,<sup>3)</sup>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최고구간이 38%로 너무 낮다는 점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서민대중도 증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도 올려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투자가 줄어 성장을 해친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법인세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만 해도 34%였으나 그 뒤 계속 내려 지금은 22%이다. 그러나 각종 조세감면이 많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14년 14%에 불과 하여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인세율은 30%대이며 실효세율도 대개 25%를 넘는다. 더구나 이런 나라에

3) 한국 0.15%, 미국 일본 영국 등은 1.0-1.5%.

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차익에 고율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나라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2015년 5월 CNN에 출연하여 “미국의 법인세율이 높아 이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전연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2014년 현재 다 같이 48%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 부담증가가 투자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투자수요는 많은데 기업에 자금이 없어 투자를 못할 때에는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법인세율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은 여유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해외에 투자하고 200조원 내외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을 쌓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국내투자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 오히려 그 법인소득을 가계로 환류시켜 소비증대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대신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시켜준다면 기업도 흔쾌히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부담도 늘려야 한다. 2013년의 경우로 보면 GDP에 대한 소득세수의 비율은 OECD평균 8.7%인데 우리는 3.6%이며 총 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도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30%이상인데 우리는 15%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인데 이것은 너무 낮으며 예컨대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과세도 우리나라는 세 부담이 선진국의 10-20%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역진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세율 10%는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낮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 (3) 소득재분배 개혁내용

첫째, 복지적 지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생존·교육·의료 등 3대 국민기본수요의 단계적 사회화를 통하여 빈부격차 축소, 국민복지 증대, 소비증대를 통한 성장촉진, 계층상승의 희망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토록 한다.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국내투자기피로 인한 성장둔화와 소득순환 장애를 재정투자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소득재분배적 재정투자는 국민복지 시

설, 환경개선 사업,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국민생활편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재분배정책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7〉 소득재분배 정책방향

부문	정책내용
저출산 대책	출산과 보육비용의 완전 사회화
취약계층 소득보장	최빈곤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
교육기회 균등	실업고등학교 완전 무상화,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일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무상화
노동복지 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정규직과의 격차축소, 실업자 생활보장 강화, 재취업훈련
의료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 강화, 상장기업의 배당증대 유도

둘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경제성장을 유효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희삼(2015)에서 보듯이 계층대물림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선진국들은 대개 50-60%인데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71%이고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국내 고졸자들보다도 높다. 그런데도 대졸자의 초임은 고졸자보다도 60%나 높아 그 격차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크다. 대학진학률은 60%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실업고등학교 등 직업교육은 전면 무상화하고 졸업 후 취업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보장하고 임금격차를 좁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바꾸어 여기 합격한 사람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육에 대해 소득계층 하위 25%의 저소득자는 전액 국가부담, 하위 25-50%계층은 등록금의 50%를 국가부담으로 하여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만 잘 받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입시에 내신상대평가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특목고가 대학입시학원화 하지 않고 본연의 분야에 특화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일반고교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여 사교육의 시장수요를 줄여가야 한다.

셋째, 부동산과 주거비 개혁이 필요하다. 땅은 재생산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유주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다른 사람, 또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으로 생기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이익은 사회이익과의 상충관계에서 실현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고비용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난 60년 동안의 부동산 중심사회 그리고 여기서 생긴 집값 폭등이 그 밑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부동산 값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부동산 값은 내려야 하지만 부작용이 큰 만큼 현재의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대신 소득을 늘려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중점 추진하여 젊은 계층의 수요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해야 한다. 2015년 현재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그것이 당장 위기를 유발할 요인은 아니지만 이대로 둘 경우 소득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소비침체와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 크다. 이 문제는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우선 부채총량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내로 통제하고, 안심대출의 경우처럼 고금리의 악성부채는 장기저금리의 양성부채로 대환하고, 저소득층의 부실채무는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의 실질부담이 가벼워지도록 해야 한다.

## 2. 성장구조개혁

한국은 잠재성장률과 현실성장률이 모두 3%내외 수준에 있다. 이것은 OECD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양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복지지출을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어느 때 인가는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적어도 4%이상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장구조 개혁이 촉구되는 것이다. 성장구조 개혁은 잠재성장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성장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의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보기로 한다.

첫째,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의 20%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현재 10%인데 이들 조합원들은 그 대부분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590만 명 가운데 73%가 월 300만 원 이하, 48%가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기업 근로



자들은 대부분 노조 조직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기득권적 이익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업 등 강경투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소외되어 있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임금 피크제 실시, 노동유연성 강화, 그리고 파업 없는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사쟁의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노사쟁의에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하고 이 중재에 불복하여 파업을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투자와 생산에 있어 부문 간의 지나친 칸막이,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 과도한 규제가 산업전반에 걸쳐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전경련 조사(2015)에 의하면 의료 관광 물류 등 10대 산업에 걸친 규제를 제거한다면 57조원의 부가가치와 11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규제는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산업부문에 많고 특히 생명공학 빅데이터 태양광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정부개혁이 필요하다. 공공부채의 증가는 경제체질을 산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원칙을 확고한 의지로 지켜가야 한다. 이는 증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기업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이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혁을 밀고 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개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양면의 위기에 당면해 있다. 이 위기는 경기변동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금융적인 부양책으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 잠재성장능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구조개혁과 분배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구조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혁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의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면 노동조합이 반대할 것이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면 사측이 반대할 것이다. 대체로 성장구조개혁은 진보층·근로자·저소득층이 반대할 것이고 분배구조개혁은 보수층·대기업·고소득층이 반대할 것이다. 이 경우 한 쪽에 경도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갈등만 조성되고 개혁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두 가지의 구조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층이 손익을 서고 주고받게 될 것이므로 개혁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는 흔쾌히 더 낼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실업과 노후대책이 강화된다면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독일의 사회당 에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있는 근본 차이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지대가를 주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구조개혁은 국민통합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양면에 걸친 구조개혁은 국민들의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전체 사회발전을 위해 개인이익을 자제할 수 있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지금 계층 지역 이념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계층통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념통합을 위해서는 중도영역의 확장과 보수 진보간의 보완적 포용,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sup>4)</sup> 결국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이러한 개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4) 남북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의 모색도 중요하다. 북한자원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2012년 현재 9,700조원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우라늄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은 세계 1-2위이며 그 밖에 금 철 흑연 무연탄 아연 등은 세계10위 이내에 있는데 대부분 미개발상태로 있다. 여기에 저가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2015년 개성공단의 임금은 월 150달러로 중국 단동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거의 무한한 투자수요를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한다면 한국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의하면 통일에 따르는 경제편익은 비용의 3배에 이르며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통일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 ■ 참 고 문 헌

1. 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12.
2.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2015.
3. 박 승, 제6장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S. S. 쿠즈네츠』, 유풍출판사, 1982.
4. 박종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한국금융연구원, 2014. 7.
5. 신동아·엠브레인, “2030세대가 내다본 2045년, 나의 5060 인생,” 신동아, 2015년 11월호
6. 오영석, “산업구조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KIET, 2013. 1.
7. 이내찬,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012, pp. 5-40.
8.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계 기자단 세미나 자료, 2015. 10. 23.
9. 최인방·박상우,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BOK이슈노트』, 2012. 12.
10. 통계청, 『2016년 4월 인구동향』, 2016.
11.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변동과 통화정책적 대응,” 『조사통계월보』, 2006. 7.
12. 한국은행·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4.
13. 현대경제연구원,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2011. 12.
14. ———, “통일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경제주평』, 14-16, 2014. 4.
15. Bluhm, R. and Adam Szirmai, “Institutions, Inequality and Growth,” *Innocenti Working Paper*, 2011.
16. Eichengreen, B. and M. Bordo, “Crises Now and Then: What Lessons from the Last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NBER Working Paper*, 2002.
17. IMF, “Sharing the Growth Dividend: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IMF Working Paper*, 2016.
18. IIF, “Key Issues,” *Capital Markets Monitor*, November/December 2015.
19. Kumhof, M. and Romain Ranciere, “Inequality, Leverage, and Crisis,” *IMF Working Paper*, 2010.
20.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955.
21. ———, *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s*,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53.
22.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23. Piketty, T. and Emmanuel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2003.
24. Schwab, K.,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14.
25. Stiglitz, J. E., *Freefal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2010.

## Korea's Economic Crises and Structural Reform

Seung Park\*

### Abstract

Korean economy is now facing three crises: low social mobility, widening bi-polarization, declining potential growth rate. Three reforms are therefore necessary: a reform in economic system to enhance social mobility, a proactive redistributive reform through higher tax burden, a structural reform to increase the potential growth rate. These reforms are not easy since labor reform will be rejected by the progressive whereas higher tax burden will not be welcomed by the conservative. Therefore,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reforms should be driven at the same time.

**Key Words:** economic crisis,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al reform

**JEL Classification:** A10, P1

---

*Received: June 14, 2016. Revised: July 4, 2016. Accepted: July 7, 2016.*

\* Professor Emeritus,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e-mail: ps360216@gmail.com